

주간건설 *Review*

683호 2021.7.16(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홈페이지 : <http://www.kfcc.or.kr>, 연락처 : 02-771-7936

주소 : (121-916)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2103

■ **업계 동향**

- ▶ 포스코건설, KOICA와 손잡고 개도국 건설인력 양성
- ▶ 롯데건설, 콘크리트 압축 강도 향상 화학 혼화제 개발
- ▶ 한화건설, 로봇배달 서비스 도입
- ▶ 삼성물산, 건설현장 안전 비용 대폭 확대

■ **건설경제 일반동향**

- ▶ 상반기 공공공사 입찰액 최근 5년 최대
- ▶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5년간 낙찰률 지속 하락 추세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21.7.10(토)~2021.7.16(금)>

제683호 2021.7.16(금)

<업계 동향>

◆ 포스코건설, KOICA와 손잡고 개도국 건설인력 양성

○ 7월15일 포스코건설과 KOICA는 포스코건설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청년층 건설기능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IBS(Inclusive Business Solution,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약정하였음

○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IBS)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CSR)·공유가치 창출 관련 재원을 국가의 공적개발 원조사업 비용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포스코건설과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시행하고 있는 ‘해외 건설기능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 건설 현장 인근 지역사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채용과 연계한 직업 훈련소를 운영함으로써 현지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는 프로그램인데, 해외 건설기능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KOICA IBS 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포스코건설은 KOICA로부터 사업비의 30%를 지원받게 되었음

○ 포스코건설은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방글라데시 청년 500명을 4개의 기수로 나눠 기수별로 9주간 이론과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생 중 300여명을 마타바리 발전소 건설 현장에 채용할 계획이며, 지난 7월14일 열린 1기 입과식에는 125명의 교육생들이 화상으로 참석하였음



7월14일 화상으로 진행된 ‘방글라데시 청년층 건설기능인력 양성 프로그램’ 1기 입과식

◆ 롯데건설, 콘크리트 압축 강도 향상 화학 혼화제 개발

○ 7월13일 롯데건설은 롯데케미칼, 동남기업과 함께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향상하는 혼화제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했다고 밝혔음

○ 롯데케미칼은 혼화제의 주요 원료인 산화에틸렌 유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롯데건설

등과 공동연구를 통해 콘크리트의 초기 강도를 높이는 혼화제를 개발해 제품화하는 데 성공하였음

- 이번에 개발한 혼화제는 일반 제품보다 콘크리트 제조 시 물 사용 저감효과가 우수하고, 콘크리트 유동성과 점성 개선에 탁월한 장점이 있고, 일반 혼화제를 사용했을 때보다 콘크리트 강도도 2배 이상 강해졌고 작업 과정에서 거푸집 전도 위험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롯데건설은 혼화제를 실제 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결과 공기 지연을 최소화하고 이산화탄소 발생량 저감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콘크리트 구조체 품질 확보를 위해 해당 기술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음



공동개발한 화학 혼화제를 현장에 적용해 압축강도 테스트를 하는 모습

◆ 한화건설, 로봇배달 서비스 도입

- 한화건설은 7월12일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한화 포레나 영등포'에서 실내 로봇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음

- 이 서비스는 배달 앱(app)을 통해 주문한 음식이 아파트 1층 공동현관에 도착하면 상주 중인 배달 로봇이 무선통신으로 공동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호출한 뒤 층수를 입력해 원하는 층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음식이 도착하면 주문 고객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 알리는 방식임



국내 최초 아파트 로봇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한화 포레나 영등포' 주민

- 한화건설은 이 서비스 도입을 위해 아파트 설계 단계부터 건물 내 단차를 없애고 여닫이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했으며 '원패스키'를 배달 로봇에 탑재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다고 설명하였음

- 한화건설은 작년 7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 서비스를 준비해왔음

◆ 삼성물산, 건설현장 안전 비용 대폭 확대

- 7월12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건설 현장의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법정 안전관리비 외에 자체적으로 안전강화를 위한 비용인 안전강화비를 편성하는 등 안전 관련 비용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음
- 국내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사유형별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에 따라 공사 금액의 1.20~3.43% 범위에서 안전관리비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비용을 더 지출하겠다는 것



작업 안전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삼성물산 직원과 근로자

- 삼성물산은 안전관리비 외에 현장의 자체 판단으로 안전을 위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안전강화비를 활용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안전강화비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안전관리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투자,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
- 또한 삼성물산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법정 안전관리비도 공사 착수를 위한 선급금과 함께 100% 선집행해 협력업체가 공사 초기부터 안전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 안전관리비를 초과 사용해도 실제 사용금액을 추가로 정산해 줄 방침
- 삼성물산은 안전강화비 집중 투자로 협력업체와 근로자 등 현장의 구성원이 중심이 되는 안전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하였음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21.7.10(토)~2021.7.16(금)>

제683호 2021.7.16(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 상반기 공공공사 입찰액 최근 5년 최대

- 7월14일 e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공 건설공사 입찰금액이 17.7조원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 이 같은 공공공사 입찰액 증가세는 올해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공사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이 폐지됨에 따라 기초금액 50억원 미만에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전문건설공사 입찰이 다수 포함됨에 따른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음

<주요내용>

- e대한경제가 공공공사 입찰지원서비스 전문업체인 비드웍스에 의뢰해 분석한 '2021년 상반기 입찰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종합건설업을 대상으로 입찰이 집행된 공공공사는 총 1만2392건에 기초금액은 총 17조6892억원으로 집계

<최근 5년간 입찰현황(상반기)>

(단위 : 억원, 각년도 상반기 기준)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0억미만	입찰건수	5,076	5,103	5,115	6,109	9,382
	기초금액	19,257	19,617	18,276	22,963	37,601
10억이상 50억미만	입찰건수	1,507	1,452	1,592	2,127	2,466
	기초금액	35,721	34,543	34,695	46,747	52,331
50억이상 100억미만	입찰건수	243	210	214	355	308
	기초금액	17,751	15,611	14,617	24,358	21,413
100억이상 300억미만	입찰건수	175	156	198	208	185
	기초금액	29,342	27,518	31,368	34,653	30,321
300억이상	입찰건수	73	50	50	55	51
	기초금액	60,239	56,502	34,861	35,313	35,226
총건수		7,074	6,971	7,169	8,854	12,392
총합계	기초금액	162,310	153,791	133,817	164,034	176,892

- 전년 동기(8854건, 16조4034억원)에 비해 건수는 40%, 기초금액은 7.8% 증가한 것으로, 기초금액 50억원 미만 입찰이 크게 늘어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특히 기초금액 10억원 미만 입찰은 9382건, 3조7601억원으로 전년 동기(6109건, 2조2963억원)에 비해 건수는 53.6%, 금액은 63.7% 급증
- 반면 기초금액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입찰은 185건, 3조321억원으로, 전년 동기(208건, 3조4653억원)에 비해 건수는 11.06%, 금액은 12.5% 감소하였고, 기초금액 300억원 이상 입찰은 51건, 3조5226억원으로, 전년 동기(55건, 3조5313억원)보다 건수는 7.27%, 금액은 0.25% 감소
- 공종별로는 토목·건축공사가 1만1131건, 16조2959억원으로 전년 동기(7960건, 14조8814억원)에 비해 건수는 39.84%, 금액은 9.51% 증가한 반면, 산업환경설비공사는 179건, 5571억원으로 전년 동기(143건, 8792억원)에 비해 건수는 25.17% 늘어났지만 금액은 36.64% 감소하였음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650건, 2조3351억원으로 가장 많은 입찰이 이뤄졌고 △경상남도 1005건, 1조4032억원 △전라남도 966건, 1조3957억원 △서울시 1564건, 1조3687억원 △전라북도 721건, 1조2046억원 △강원도 937건, 1조1036억원 등이 뒤를 이었음

◆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5년간 낙찰률 지속 하락 추세

-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2016년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조달청이 집행한 종심제 평균 낙찰률이 8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가격과 기술력을 동시에 검증하는 종심제 도입을 통해 ‘최저가낙찰제’ 폐단을 막고 공공 건설업계 기술력 향상을 꾀했지만, 제도 도입 5년 동안 낙찰률은 도입 초기와 비교해 곤두박질친 것

<주요내용>

□ 현황

- e대한경제가 조달사업통계를 통해 최근 5년(2016년~2021년 5월) 간 조달청이 집행한 종합심사낙찰제를 분석한 결과, 종심제 평균 낙찰률은 78.5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조달청이 이 기간에 집행한 종심제 건수는 모두 146건, 총공사 부기금액(입찰 표면금액이 아닌 시공사가 실제로 낙찰한 금액) 기준 6조3004억원으로 집계
- 종심제 도입 첫 해인 2016년에는 낙찰률이 80.7%를 기록했지만, 2017년 78.6%, 2018년 77.0%로 지속 하락하다 2019년 75.70%로 최저점을 기록하고 2020년 79.5%, 올해 5월 기준 80.4%로 소폭 반등
- 이처럼 우수한 시공품질 확보, 적정공사비 반영이란 종심제 도입 근본 취지에도 불구하고 낙찰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낙찰률 상승을 우려해 정부가 낙찰

를 하락 유도하는 장치들을 제도 곳곳에 배치해 놓았기 때문

- 종심제 동점자 발생 시 ‘최저가 입찰자’가 우선 수주하는 ‘동점자 처리기준’의 폐해가 대표적인데, 종심제 동점자 처리 집행기준을 보면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사회적책임 점수의 합산 점수가 높은 자 → △입찰금액이 낮은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종심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 → △추첨 등의 순서로 낙찰사를 선별하고 있음
-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사회적 책임 점수 만점을 받는 회사가 많아 동점인 경우가 많은 탓에 사실상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기준으로 동점자 처리 기준이 운영되고 있어 업체들은 수주를 위해 저가 투찰에 나설 수 밖에 없음
- 이 밖에도 △가격점수 소수점 넷째자리 반올림 조항 △예정가격 88% 초과 투찰 입찰금액 균형가격 산정제외 등이 낙찰률 하락을 유도하고 있음

<조달청 발주 종합심사낙찰제 운영 현황 추이>

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5월)
평균 낙찰률 (78.5%)	80.7%	78.6%	77%	75.7%	79.5%	80.4%
총 공사 부기금액 (시공사가 실제로 낙찰한 금액)	18,620억원	20,334억원	15,398억원	11,023억원	9,464억원	5,312억원
공사집행 건수	33	43	25	19	18	8
본 입찰금액	23,073억원	25,870억원	19,997억원	14,561억원	11,904억원	6,606억원

□ 시사점

-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이후 시설공사 낙찰의 기본 조건인 예정가격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 낙찰률은 70% 내외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공사비 부족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와 그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정상화를 위해서는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이 핵심이라는 평가
- 이에 정부에서도 지난해 9월 홍남기 부총리 주재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 동점자 우선순위를 개선키로 발표한 바 있지만, 종심제 실무 집행기관인 조달청이 올해 1월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 개선은 오는 9월 전까지 계약예규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어서 제도개선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21.7.10(토)~2021.7.16(금)>

제683호 2021.7.16(금)

<건설산업 제도·정책 동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정부는 7월12일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함
- 이에 대해, 업계, 경제단체, 법조계에서는 예방보다 처벌에만 중점을 뒀다는 지적과 더불어 처벌대상에 대한 기준과 범위가 불분명해 기업들의 경영환경만 악화시킨다고 비판하면서, 산업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정안을 보완해야 하며, 추상적이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과도한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

<제정안 주요내용>

□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애 등의 급성 중독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에 대하여 규정

□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지하역사(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 등,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등(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중 주유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등으로 규정

□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업무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특히,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토목건축공사업 시공 능력의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함

□ 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으며,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및 과태료 부과

-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시간, 교육시기 및 방법, 교육비용의 부담 등을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횟수,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과태료(1000만원~최대 5000만원)의 부과기준을 규정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
- 세부적으로 보면, 중대 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 재해자 현황, 재해 원인,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 사항 등을 관보 등에 1년간 게시하도록 함